"한·중 경제문화교류, 지방 역할 크다"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광주국제심포지엄 전문가들 한 목소리 자치단체간 교류 확대·기후위기공동대응 등 '광주 제안' 채택

최근 한·중 양국 간의 경색 관계에도 양국의 지 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은 보다 확대하고, 기후위 기 대응을 위한 지방도시 간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는 의견이 제시됐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이날까지 광주홀리데이 호텔에서 열린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광주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한 양국 전문가들은 최근 양국 관계의 부침에도 불구하고 경제·문화·환경 분야 협력이 절실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서는 한·중 지방자치단체 간 구체적 협력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이 같은 의견에 뜻을 모아 종합토론 을 거쳐 ▲양국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지속 ▲ 경제 문화분야 교류협력의 확대 ▲기후위기 한·중 지방도시 공동대응 등 3개 항을 주요 내용으로 한 '한·중 우호에 관한 광주 이니셔티브'를 채택했다.

안유화 성균관대 교수는 세계경제가 플랫폼 경 제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으며, 중국이 이 부분에 대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제적 추세를 소개 했다. 그러면서 "광주에 한·중 지방정부 간 탄소배 출권 거래 플랫폼을 마련한다면 디지털 결제, 거 래내역 공증, 기업 간 거래중개 등 연관 금융산업 을 넝쿨째 가져올 수 있다"고 제안했다.

지앙신다 허베이 미술대 대학원장은 초·중학생 여름 교환캠프, 각 장르 간 예술인 교류, 양국 교차 문화마을 조성 등 문화적 측면의 교류방안을 제시 部门

양국 전문가들은 기후위기에 대해 한결같이 심 각성을 경고하며 국가 간 협력 못지않게 지방자치 단체 간 구체적 공동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중의 미래와 지방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광주시가 주최하고 주한 중국대사관, 주광주 중국총영사관이 후원했다.

양 국의 석학들이 참여해 경제·환경·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주도가 아닌 지방정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새로운 교류협력방안을 논의하고 모색한 자리가 됐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은 중국 CCTV, 국영 신화 통신, 인민망 등 주한 중국 언론사 특파원들이 현 장을 직접 취재해 실황을 자국에 송출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가을 옷 입은 문화전당 산책로 완연한 가을 날씨을 보인 20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 산책로의 가로수들이 울긋불긋 물들어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무안국제공항, 복합환승센터 설치 필요"

광주전남연구원 '교통 접근성 개선 필요' 보고서

국토 서남권의 해외관광거점인 무안국제공항이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복합환승센터, 도심공항터 미널 등을 설치해 이용객의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 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전남연구원은 20일 '광주전남 정책 브리 프'에서 '무안국제공항 교통접근성 개선 필요'를 주제로 한 보고서에서 무안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교통 시스템 재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를 필요한 시설로 도심공항터미널, 무안국제공항 (철도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시외버스 신설 노선 등을 제안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무안국제공항 이용객의 지역별 분포는 광주가 70.1%, 전남 24.2%, 전북 4.4%, 기타 지역이 1.3%로 지역공항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무안국제공항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공항까지 이동 거리

및 시간 과다', '공항까지의 대중교통수단 불충분' 등의 답변이 51.9%에 달했다. 또 이용객의 교통수단은 승용차(승합차)가 97.6%에 달하며, 기타 마을·시내버스, 셔틀버스,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용률은 1.8%에 불과함에 따라 대중교통을 이용한 교통 접근성 개선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철수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무안 국제공항으로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 킬 수 있는 다양한 시설 설치가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며 "광주·전남만이 아니라 충청, 경상 등 타 지역에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 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폐가전 11만7522대 무상 수거

지난해 하루 평균 320대…전년보다 21% 증가

광주시는 지난해 폐가전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통해 모두 11만7522대의 못 쓰는 전자제품을 수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거량은 2020년 9만 6509대보다 21%, 2018~2020년 연간 평균 6만 9827대보다 68% 늘어났다.

하루 평균 320대 꼴로 품목별로는 냉장고가 2만 6000여대로 가장 많았으며, 텔레비전 1만6000여대, 세탁기 7900여대 등이었다.

이처럼 수거량이 증가한 데는 시민들의 적극적 인 협조와 수수료 면제,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사전예약·방문 수거의 편리성 때문인 것으로 풀이 되다

폐가전은 한국 전자제품 자원 순환공제조합이 수거해 리사이클링센터로 옮긴다.

철, 구리, 알루미늄 등은 재활용하고 냉매 제품

과 형광 물질은 안전하게 처리한다.

수거 대상은 냉장고, 세탁기, 가습기, 비디오플레이어, 스캐너 등 소형 폐가전이다.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가구, 피아노 등 악기류, 전기장판류는 수거하지 않는다.

폐가전 수거를 원하는 시민은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폐가전'을 검색하거나 폐가전무상배출예약시스템(www.15990903.or.kr) 등으로 평일 오후 6시까지 예약 접수하면 된다.

손인규 광주시 자원순환과장은 "폐가전 회수체계 구축으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자원재활용 극대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폐가전 수거에 지속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여성가족재단 신임 대표에 김경례 교수

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에 김영집

광주여성가족재단 신임 대표이사에 김경례 교수가 임명됐다.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후보로는 김 영집 전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외부총장이 선임됐다.

광주시는 20일 "광주여성가족재단 제6대 대표 이사로 김경례 전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경례 신임 대표이사는 이날부터 3년간의 공식임기를 시작한다. 김 신임 대표는 전남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광주여성가족재단 교류협력팀장·전남대 여성연구소 연구원·전남대 사회과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전남대 사회적재생산연구단 학술연구교수·광주시인권옴부즈맨·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책위원·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정책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또 광주여성의전화 이사·광주여성노동자회이사·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정책위원 등 지역 여성인권운동단체 임원도 맡고



김경례 대표



표 김영집 후보

T1

이에 앞서 지난 19일 광주테크노파크는 이사회를 열고 제10대 원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2명 후보 가운데 김영집 전 부총장을 최종 후보로 선임했다.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은 임기 2년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승인을 거쳐 광주시장이 임명한다. 김후보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클러스터단장, 시민단체 참여자치21 공동대표, 광주 광산구기업주치의센터장,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비상임 이사등을 역임했다. /박진표기자 lucky@

도지사인증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신청하세요

道, 28일까지 신규·연장·품목 추가 희망업체 접수

전남도가 '2022년 하반기 도지사인증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신규·연장·품목추가 희망업체 신청을 오는 28일까지 접수한다. '도지사인증 농수특산물 통합상표'는 전남의 우수한 농수특산물과 가공식품의 품질을 전남지사가 인증해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인증 품목은 전남에서 생산한 농산물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 8종 473개 품목이며, 인증 기간은 3년이다. 신청 대상 은 전남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농수 특산물 제조업체와 전남 소재 공장에서 전남산 원 료로 식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로, 신규인증 을 희망하거나 인증 기간이 만료돼 연장이 필요한 업체다. 통합상표 사용을 바라는 업체는 오는 28일까지 시·군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존 도지사인증업 체로서 품목추가를 바라는 업체는 이번뿐만 아니 라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전남도는 신규·연장 신청 품목에 대해 1차 서류 평가 후 분야별 평가반을 구성해 현지심사를 거친 후 12월 중 '통합상표심의위원회'에서 통합상표 사용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도지사인증 사용허가를 받은 업체는 포장디자인 제작비(업체당 1000만원), 자가품질검사비(업체당 225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전남도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https://jnmall.kr/)'에 우선 입점할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